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끊는 건설산업 개혁입법 발의 기자회견>

2023년 11월 15일 (수) 13: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1년은, 건설현장을 30년 전으로 퇴행시켰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는 커다란 사회적 대가를 치른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간 건설산업 정상화와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전자카드제, 전자적 대금 지급을 통한 임금 직접지급, 임금·자재·장비대금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제도가 목표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공사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고, 일한 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중의 기본을 위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관행의 벽은 현장의 가림막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공공발주 현장에서만이라도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SH, 경기도 등 일부 공공발주 현장에서 하도급거래 과정의 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관행의 벽을 점차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행해진 ‘노사법치’는 건설사들의 위법, 비리, 부패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주고, 법을 바꿔 면죄부를 줬습니다. 반면 건설노조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낙인을 찍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온갖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동원했습니다.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인 LH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나 올해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자이아파트는 시공과정에서 지하층이 붕괴하였고, 국토교통부 진상조사 결과 설계, 시공, 감리에 있어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LH가 제출한 수도권 3곳 현장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현장 근로자의 60% 이상이 팀장 등을 통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었으며, 순살아파트가 무너진 올해 4월에는 그 비율이 85%에 달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력을 고용한 불법하도급의 존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건설사들의 외국인고용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발주처인 LH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운용한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0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5.23-8.30) 특별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통해 「무자격자 하도급, 시공팀장 일괄수령 등 불법하도급 적발시 고용노동부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인천 검단 LH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설산업에 여전히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지금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와 하도급을 자제하고 직접시공 유도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공공발주에서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자비하게 건설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건폭 몰이를 끊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상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건설현장을 만들고, 전 부문에 걸쳐 적정임금제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3. 11. 15.

적정임금제 법안발의 기자회견
- 불법하도급·고용불안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건설산업 개혁입법 발의 기자회견 -

□ 취지 및 배경

- 2022년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21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7.5%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산업으로는 가장 큰 고용규모를 가지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부터 적정 임금제 도입, 건설기능인등급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개혁입법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와 하도급을 자제하고 직접시공 유도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함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공공발주에서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 23.11.15. (수) 13: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행 순서

- 사회 : 조오섭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발언 1 :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발언 2 :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우원식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강한수 건설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3:40~13:41	1'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 조오섭 국회의원
13:41~13:45	4'	- <발언1>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각 법안 적정임금제 도입 취지 및 의의	-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13:45~13:50	5'	- <발언2>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개혁입법 과제 추진	-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13:50~13:54	4'	- 기자회견문 낭독	- 우원식 국회의원, - 강한수 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13:54~13:55	1'	- 마무리	-

[행사사진]



[참고자료]

1. 건설근로자 기능훈련 사업 개요

1) 관련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p>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p> <p>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p>
<p>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관련 사업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 위탁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 사업 : 국토교통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 위탁

3) 사업 목적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 건설업 공급부족 직종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과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기능훈련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 도모, 타일, 도장, 건축목공, 형틀목공, 건축배관, 일반용접 등의 직종에서 시행.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 사업 :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 2022년도에 형틀목공 / 조적 / 방수 / 타일 / 도장 / 건축배관 등 6개 직종 초급 및 중급 대상자 승급교육 실시함. 2023년 12월부터 위 6개 직종외에 추가로 철근 / 비계 / 건축목공 / 일반용접 / 석공 / 미장 등 6개 직종 추가해서 해당 직종 초급 및 중급 대상자 승급교육 실시할 예정임.

4) 사업 기관

- ▶ 건설기능향상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받아 민간 직업훈련기관 공모받아 실시
 - 2023년 총 38개 훈련기관 참여
- ▶ 건설기능등급 연계 교육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받아 민간 직업훈련기관 공모받아 실시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총 10개 훈련기관 참여

2. 건설근로자 기능 훈련 예산의 폐지 및 삭감

1) 관련 예산 항목 및 집행 내역

○ 고용노동부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1			2022			2023.9월		
	예산	집행 (실집행)	집행률 (실집행/예산)	예산	집행 (실집행)	집행률 (실집행/예산)	예산	집행 (실집행)	집행률 (실집행/예산)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및취업지 원	11,629	11,629 (10,550)	100.0 (90.7)	11,629	11,627 (9,153)	99.9 (78.7)	10,500	10,025 (6,199)	95.5 (59.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8,229	8,229 (7,244)	100.0 (88.0)	8,229	8,227 (5,939)	100.0 (72.2)	7,100	6,811 (3,793)	95.9 (53.4)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3,400	3,400 (3,306)	100.0 (97.2)	3,400	3,400 (3,214)	100.0 (94.5)	3,400	3,214 (2,406)	94.5 (70.8)

○ 국토교통부 일반예산 : 건설기능인 등급제사업 - 승급교육

(단위: 백만원, %)

구 분	'22		'23 예산 (A)	'24예산안					증감 (D-A)	
	예산	결산		1차심의		2차심의		검토 결과 (D=B+C)	%	%
				요구 (예산요구 기준)	현반영 (B)	추가 요구	검토 (C)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	1,000	456	1,000	500	250	250	250	500	△500	△50
· 승급교육	1,000	456	1,000	500	250	250	250	500	△500	△50

2) 24년도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폐지

○ 고용노동부 답변 자료 (이은주 의원실 요청)

<p><input type="checkbox"/> 2024년 사업 예산 요구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등 대내외 지적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처와 재정당국 간 협의 하에 사업 폐지를 결정 <p><input type="checkbox"/> 2024년 사업 예산 삭감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향상지원)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

- * 취업률 추이 : ('19년) 71.4% → ('20년) 67.3% → ('21년) 56.0% → ('22년) 46.1%
- 아울러 '21·'22년도 결산 심사시 계속하여 성과 부진 및 개선 필요에 대한 국회 지적이 있었음
- o (취업지원) '22년 총 취업자수가 8,579명으로 투입 예산('22년 예산 34억원) 대비 취업 성과가 매우 낮음
- 또한 취업지원센터에서 실적 집계 관련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어 약정해지 사례 발생 ('22년 2개소, '23년 1개소)

3.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 삭감 현황 및 문제점

1) 예산 현황

-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자체가 폐기되고 예산액도 전액 삭감됨.
-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노동자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
- 국토교통부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예산 역시 10억원 → 2억5천만원으로 삭감됨.

2) 건설노동자의 기능훈련 교육 필요성

- 최근 순살자이, 통뼈캐슬, LH순살아파트와 같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의 안전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기능이 이슈가 됨.
-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발표한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만 9865명으로 집계됨. 이는 전체 건설 현장 근로자(74만 198명)의 14.8%에 달하는 숫자.
- 지난 국정감사 시기 심상정 의원실에서 전달 받은 '인천검단 AA13-1,2BL 공공주택사업' 현장의 2021.5월부터 2023.4월까지 철근, 콘크리트 직종 투입인원을 보면 전체 732명의 건설노동자 가운데 518명이 외국인이었음.
- 불법 고용된 외국인력을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남. 한편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익힌 외국인력은 꾸준히 정주하며 현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큼.
-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건설노동자들이 배출되고, 기능을 향상하며 전수하는 것이 건축물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건설노동자 기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청년 건설노동자들을 양성하고, 건설현장에 기능인들을 투입하는 역할을 해왔음.

3) 문제점

- 건설공사의 목적물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오랜 기간 경험에서 쌓이는 기능과 노하우가 필요함. 건설기능인 등급제 역시 건설노동자의 경력과 기능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 건설현장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기능향상 지원 사업에 대한 폐지와 예산 삭감은 기능인을 양성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임.

- 건설자본 역시 기능인력 부족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기능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한국의 건설기능인을 양성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4. 요구 및 개선 방향

1) 기능 훈련 사업 및 예산의 보존

- 내일배움카드 활용 등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건설업 교육훈련은 대부분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건설산업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 조선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F4 비자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건설노동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있으며, 이중 70여억 원이 건설기능향상훈련에 사용됨. 이를 통해 건설산업 기능인력 육성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 건설노동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존속되어야 함. 이를 통해서 특화된 건설 기능인 양성을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능인 등급제사업 승급교육 예산이 10억 원에서 2.5억원으로 삭감됨. 건설노동자의 경력/기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인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골조공정 등 실제 부족한 직종의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

- 건설산업의 인력수요는 약 176만 명이며, 내국인력 공급은 약 161만 명으로 추정됨. 순수한 내국인력 공급만으로는 약 15만 2천 명의 공급 부족이 예상됨.
- 이중 강구조, 건축배관, 형틀목공, 철근, 토공, 비계 등의 직종에서는 5,000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직종은 주로 골조공정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임.
- 2023년 현재 38개 건설기능훈련교육기관 중 많은 곳이 조적, 방수, 타일, 미장, 도장 등 마감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 인력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훈련 비용이 적게 드는 직종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인해, 해당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생기기도 함.
- 한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의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의 서울, 파주, 남양주, 안산, 광양, 경기건설기능학교에서는 형틀목공, 철근공, 용접공 등에 대한 기능훈련을 실시함. 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534명을 훈련시켰고 그 중 1,044명이 취업함.
- 건설노동자 기능향상을 위한 사업이 골조공정 등의 부족 인력을 위한 직종에 집중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력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